

1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■■■ “행복e음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.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,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·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.
- * 행복e음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새로운 이름으로 “국민들께 행복을 전해주고 이어주는 정보시스템”이라는 의미(실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)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,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- (소득·재산조사 기준의 통합) 그 동안은 각 복지사업별 소득·재산조사가 달라 지자체 복지담당의 업무가 과중되어 주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.
 -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이 되던 조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.
- (공적자료 연계 확대)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·재산자료, 서비스 인력, 인적변동 사항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공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도 가능해진다.

- **(찾아가는 서비스)**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줄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 - **(맞춤형 서비스 안내)** 거동이 불편한 노인,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,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누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.
 - **(일괄신청 및 서류 감소)**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진다.
 - **(공무원 부정소지 및 부정·중복 수급 방지)**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.
- 전재희 장관은 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.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일에만 매달렸다. 이제 그 일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■ 『2008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』 결과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, www.nhic.or.kr)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『2008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』에 따르면,
 - 2008년도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환자수 55만226명, 전년보다 12.3% ↑
 - 65세 이상, 20만9,753명으로 38.1% 차지
 - 남자: ①위암>②대장암>③간암>④폐암>⑤전립샘암 順
 - 여자: ①유방암>②갑상샘암>③위암>④대장암>⑤자궁경부암 順
 - 암 진료환자 건강보험 급여비(2조5,934억원) … 진료비(2조9,286억원)
 - ☞ 건강보험 급여비 2001년 6,416억원 → 2008년 2조5,934억원, 7년간 증가율 4.04배
 - ☞ 2008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의 9.7% 차지
 - ☞ ①대장암 > ②위암 > ③폐암 > ④간암 > ⑤유방암 順
 - 2008년도 건강보험 신규 암 진료환자수 14만2,879명, 전년보다 3.9% ↑
 - 인구 10만명당 297명 … 남자(298명), 여자(295명) 비슷

- 인구 10만명당 경기도 최고(331명), 전북 최저(277명)
- ☞ 시·도별 연령표준화 할 경우, 울산 최고(438명), 전북 최저(237명)
- 암 진료환자 1인당 1년간 급여비(2007년 신규 암환자 기준)
 - 건강보험 급여비 평균 약 974만원 ... 진료비(1,096만원)
 - ①백혈병(3,542만원) > ②다발성골수종(2,017만원) > ③비호지킨림프종(1,885만원) 順

■ ■ 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

-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이종구)는 2010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 -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% 미만인 경우*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.
 - *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소득기준 4,089,273원, 재산기준 200,064,102원 미만으로 세 부지원 대상은 질환 및 도시규모별로 구분됨
 -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의 대상질환에 2010년 1월부터 지중해빈혈(D56),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(93개)질환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총 132종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.
 - ※ 2009년 현재 111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시행 중
 - 2009년 12월말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28,900명으로 대상질환에 21종이 추가되면 약 5,00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.
 - ※ 21종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특례등록자 수는 약 7,000명으로 이 중 약 70%의 환자가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추정
-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질환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(129번) 및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(<http://helpline.cdc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.
 - 또한, 헬프라인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정보를 포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10년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 사업기관 선정 결과 발표

□ (선정결과)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'10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(NICU) 사업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(제주),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(인천),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(경기)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.

○ 지난 '09년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2주간 공모한 결과, 제주대학교병원 등 6개 대학병원이 응모하였고,

○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사업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대학교병원(제주),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(인천),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(경기) 3개 기관을 '10년 사업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하였다.

※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의 경우 제2병원 건립으로 이전계획이 있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연도에 지원하기로 하고 본 지원에서 제외함.

○ 올해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은 10병상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비 15억원과 약 1.3억원(평균)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.

- 아울러 기존 사업기관(5개소)도 올해부터 신규로 약 1.3억원(평균)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.

※ '10년 사업예산: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·장비비 15억원/개소(3개소), 운영비 1.3억원/개소(8개소), 예산 총액 54억원

* '08년 사업지원 기관: 충북대병원(충북), 전남대병원(전남), 경상대병원(경남)

* '09년 사업지원 기관: 부산인제대백병원(부산), 충남대병원(충남)

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노인복지시설, 노인종합복지관, 사회복지관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09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.

※ 2009년도 평가 대상시설: 노인복지(양로)시설 62개소, 노인종합복지관 139개소, 사회복지관 390개소(서울 95개소 자체평가)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개소

○ 평가 결과, 동일 대상을 평가한 2006년 결과와 비교해 지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 점수가 상승('06)78.86→('09)85.90)한 것으로 나타나,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연도	평균	노인복지(양로)시설	노인종합복지관	사회복지관	한부모가족복지시설
2009 (제4기)	85.90	88.95	84.43	85.50	84.70
2006 (제3기)	78.86	87.09	69.95	78.09	80.31

* 평가지표 강화: 2006년도에 만들어진 서비스 최소기준안 반영 및 인권기준 지표, 시설 회계 투명성 관련 지표 신규 도입 등

○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우수(A)등급인 시설이 전체평가대상시설 576개소 중 260개소 (45.14%)로, 2006년도 631개소 중 177개소

1월 23일부터 1급 및 저소득 2급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LPG지원 예정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2010년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 2009년 지원대상자 중 “장애 1급” 및 “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며,

-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월 22일로 종료된다.

※ 차상위계층 :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
□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,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다.

○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4~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, 1~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,

- 국회 예산 심사시 “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”토록 부대의견을 달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월말까지 지원하게 되었다.

전국어린이집 중 ‘평가인증어린이집’ 50% 넘어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2009년도 제3기('09년 6월)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2,232개소 중 1,740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.

○ 이로써 2010년도 1월 현재까지 전체어린이집 33,499개소 중 29,084개소(86.8%)가 인증에 참여하였고, 이 중 2009년 제3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18,197개소(54.3%)가 인증

을 통과하였다.

- 인증 통과 어린이집 18,197개소('10년 1월 기준)를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,
 - 국공립 1,655개소, 법인 1,366개소, 직장 191개소, 가정 7,574개소, 부모협동 17개소, 민간 7,394개소로 나타났다.
-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(법적 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0조)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,
 - 인증통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의로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어린이 집에 부착·게시하게 되며,
 -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평가인증국 홈페이지(www.kcac21.or.kr),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(www.educare.or.kr),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(www.childcar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평가인증('10~'13년)에 대한 운영체제와 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추후 참여신청기간을 공지할 계획이다.

■ ■ ■ 고열량·저영양 어린이 식품 TV 광고 제한된다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
 -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고 동 식품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금지한다고 밝혔다.
 - ※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(1.19)
-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」의 시행('09.3.22)으로 학교 내에서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이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TV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
 -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
■ ■ ■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'내연금' 이용자 급증

- 지난 2009년 12월 14일 새롭게 오픈한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전광우)의 노후설계 전문사이트

‘내연금’ (<http://csa.nps.or.kr>)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총 200,000명, 1일 평균 7,000명이 방문하는 등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
- 최근 베이비붐 세대(1955년생~1963년생)의 대규모 은퇴를 중심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체계적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고자,
 - 공단은 노후설계 전문사이트인 ‘내연금’ (<http://csa.nps.or.kr>)을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·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
 - ※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‘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06~2010)’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, 25세 이상 성인남녀 중 79.3%가 노후의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준비됐다는 응답은 2.5%에 불과해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
- ‘내연금’ (<http://csa.nps.or.kr>)은 가입자의 실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한 예상연금액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3층 연금(국민연금-퇴직연금-개인연금)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필요자금을 점검해 주고,
 - 더 나아가 금융자산·부동산을 반영한 재무설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은퇴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- 이처럼 ‘내연금’ (<http://csa.nps.or.kr>)을 통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용자가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종합적인 은퇴설계를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이
 - ‘내연금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.
- 국민연금공단은 이용자들의 이러한 관심이 실제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넘어서서
 - 이용자와 국민연금공단 전 지사 노후설계 전문상담사와의 직접 상담 및 학교·단체·사업장 등으로 찾아가서 펼치는 무료 대외강의 등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.

■ ■ ■ 건보공단, 요양기관 허위·부당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, www.nhic.or.kr)은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적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“『허위·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』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활용될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
 - 공단은 그 동안 자체조사를 통하여 '08년 391억 원, '09년 449억 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.
 - 그러나 최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수법이 다양화, 지능화되고 있고 2009년 진료비 청구건

- 수는 월평균 1억 건('03~'09 증가율: 10.8%)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.
- 또한 7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허위,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.
- 이에 공단은 금년(2010년)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그 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.
 - 공단 관계자는 “개발의 주요내용은 요양급여기준 등을 전산화하고,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하여 ‘가짜환자 만들기, 진료일수 늘이기’ 등에 적용될 방침이며
 - 또한, 데이터마ining을 활용,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당청구 패턴을 발견하여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강화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적 부정·불법청구와 부당진료비 청구를 적발,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■ “국민연금 60세 전에 가입해야”

- 2009년 국민연금심사청구*에서 결정된 707건 중 10%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※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, 이전에 일시금을 탄 경우의 반환 역시 60세 이전에만 가능
 - ※ 국민연금심사청구: 국민연금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리·의결하는 행정심판 전 단계 절차
- 종전 심사청구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,
 - 2009년 심사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과거에 비해 달라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.
 - 또한,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다.
- 이렇듯 노후준비의 기본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첫 번째로 꼽고 있지만,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.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꼭 알아둘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.
 - 소득과약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

를 하여야 하며,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.

-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납부하고자 해도 납부할 수 없다. 따라서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60세가 되었으나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가입하여 60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
■ ■ ■ 무연고 분묘, 설치·사용기한 도래 분묘 관리를 위한 시범조사 실시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묘지증가 및 관리소홀에 따른 국토잡식, 환경훼손 등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단위 묘지실태조사에 앞서 금년 2월부터 5월말까지 전국 5개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묘지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시범지역 : 경기 안산시, 충북 옥천군, 전북 장수군, 경남 남해군, 전남 장흥군

□ 금번 시범조사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지역별 묘지설치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, 위치·지리정보시스템(GPS/GIS)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,

○ 조사대상지역내 모든 묘지에 신고 협조용 안내판 설치, 가족관계등록자료, 지적 및 납세정보, 지역주민 협조 등을 통하여 사망자와 연고자 관련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.

○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방법의 개선여부, 묘지·분묘관련 통계 정비, 전국조사 수행시 요구되는 인력·장비 및 예산규모를 도출하여 '11년 이후 전국적인 묘지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.

□ 보건복지가족부는 묘지실태조사의 준비단계로 실시되는 묘지시범조사를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(사장 이성열)와 2010년 1월 28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
□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·지원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“묘지관리시스템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.

■ ■ 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” 개정안에 대해 1월 29

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- 이번 개정안은 '10년 4월 1일부터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액(고운맘 카드)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,
 -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,
 -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■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금년 중 ① 수시 개·폐업 기관, ②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사단법인 기관, ③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하였다.
 -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.
 - 조사는 “수시개폐업 기관 실태”는 2/4분기, 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사단법인 기관 실태”는 3/4분기,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“는 4/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
 -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, 조사할 계획이다.
 - 정부는 '09년부터 의료계, 소비자 단체, 민간 전문가 등으로 『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』를 구성,
 - 조사 항목 선정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밝혔다.